

##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임의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66
----------	------

발의연월일 : 2024. 12. 31.

발 의 자 : 임의자 · 최수진 · 김성원  
이현승 · 우재준 · 김용태  
박성훈 · 김위상 · 김형동  
조지연 의원(10인)

### 제안이유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불 여력이 부족한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만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퇴직공제와 같은 복지 제도가 미흡하며,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어렵고, 계약서 미작성 관행으로 권익 침해의 위험이 높음. 영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복지와 안전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이해 대변 및 소통 체계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약자를 국가가 보호 주체로 삼아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더불어 보호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노동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 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약자가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 다. 노동약자가 질병, 상해, 실업 등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등을 통해 국민이 가지는 근로의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노동약자”란 국가로부터 지원 및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른 사람의 사업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
2.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노무제공 특성, 사업장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운 사람
3. 제8조에 따른 노동약자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동약자가 가지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 등이 구현되도록 할 것
2. 노동약자가 국가로부터 공정하게 지원·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다른 법률과 연계하여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증진되도록 할 것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직무능력 개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노동약자는 스스로의 노동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약자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노동약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동약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노동약자의 현황, 일하는 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로서 노동약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를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노동약자지원위원회) ① 노동약자의 지정 및 노동약자의 지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동약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노동약자의 지정 및 지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약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취업촉진 및 고용안정) 국가는 노동약자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동약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전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노동약자의 직무능력 개발에 필요한 훈련과정 개설 및 훈련비 지원
3. 노동약자의 창업 촉진, 사업화, 마케팅 활성화 등 지원
4. 노동약자에 대한 고용창출·유지·조정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노동약자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

제10조(복지 증진) 국가는 노동약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동약자의 휴게시설·쉼터 설치 및 복지 물품 지원
2. 노동약자의 생계비 자금 대출 등 생활 안정 지원
3. 노동약자의 질병·부상에 따른 생활비 및 상병수당 등 지원
4. 노동약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산 및 노후준비 지원
5. 노동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간 상생협력 지원
6. 그 밖에 노동약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

제11조(권익 보호) 국가는 노동약자의 일하는 여건 개선 및 이해 대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동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
2. 노동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3. 영세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지원
4. 노동약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려금·컨설팅·인프라 등 지원
5.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영세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

제12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등) ① 국가는 노무제공 및 보수 지급과 관련된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은 제외한다)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노동약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노무제공계약 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활용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상담·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노동약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제13조(보수 미지급 예방) ① 국가는 노동약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3자에게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예치하는 시스템 도입·운영
2. 보수 지급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 지원
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
4. 그 밖에 노동약자의 보수 미지급 예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국가는 노동약자에 대한 보수 미지급 예방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미지급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노동약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



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약자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지원하는 공익위원을 둔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 또는 분쟁 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노동관계 업무 또는 분쟁조정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관계 업무 또는 분쟁조정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 또는 분쟁조정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중 3명 이내의 공익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1.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
2. 노무제공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분쟁
3.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조정조서에는 분쟁 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⑩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제6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분쟁조정 지원) ① 국가는 노동약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상담, 협의, 조정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노동약자에 대한 분쟁조정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는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제3항에 따른 비밀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경력관리) ① 국가는 노동약자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노동약자의 근무처, 경력, 자격 등에 관한 기록 접수 및 증명서 발급

2. 노동약자의 경력정보를 기록·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3. 그 밖에 노동약자의 경력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약자의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노동약자에 대한 경력관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력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제회 설립 등) ① 노동약자 또는 사용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 중의 어느 하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노동약자인 구성원 간 상호부조
2.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지원

② 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공제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해서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회(제1항제1호·제2호를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긴급한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소액 대부
2. 경제적 위험 등에 대비한 자산형성 지원
3. 복리후생 증진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4. 경력관리 지원, 직무능력 개발,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5. 생애주기 노후준비를 위한 진단, 상담, 교육
6.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공제회 설립과 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공제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회는 노동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제회의 인가 요건 및 절차, 공제사업의 운영 및 감독,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제회 지원 특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제2항, 제20조의5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노동약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기업·공제회 간 협력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공제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조성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노동약자지원재단 설립 등) ①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약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약자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노동약자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지원
3.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노동약자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상담·협의·조정 등 지원
5. 노동약자의 이해 대변 및 소통 활성화
6. 노동약자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재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재단은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 또는 위탁을 통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⑨ 제2항제6호에 따른 노동약자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그 밖에 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경력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약자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